

데스크 시각



박석천 문화부장·편집국장 부국장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은 세계적인 고전이다.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카뮈를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적어도 세계문학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오늘, 엄마가 죽었다"라는 첫 문장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주인공 모르소르의 건조한 독백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을 만큼 강렬하다.

소설 '이방인'은 부조리극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카뮈는 기존의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무너진 것을 '부조리'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전에는 '부조리' (不條理)의 의미가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음'이라고 기술돼 있다. 물론 문학적 관점에서 부조리는 훨씬 포괄적이다. '무의미한 세계에 처한 인간의 인식을 드러내는 경향'을 뜻하는데 소설 '이방인'의 주인공 행태는 단분히 부조리한 특징을 보여준다.

'내란 혐의' 재판의 몇몇 장면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다. 주인공은 장례식 때 시신 옆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다음날 직장 동료였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는다. 어머니의 죽음과 장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상주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가장 황당한 장면은, 며칠 후 모르소르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것은, 바닷

부조리가 일상이 된 시대

가 모래밭에 눌러 갔다가 햇볕에 눈이 부신 나머지 우발적으로 발표를 한다는 사실이다.

소설은 꾸며낸 이야기이기엔 그럴 수 있겠다 싶다. 하지만 현실에서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일들은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부조리함을 환기한다. 요즘 들어 무서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면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둘러싼 과정에서 보여지는 몇몇 장면들이 그렇다.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표정이 화제가 됐다. 방청석 일부 지지자들의 "윤 어게인" 응원에 윤 전 대통령이 미소를 머금었는데, 며칠 전 그보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내란 특검팀의 사형 구형에 열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대학 재학 시절 학교 모의재판 당시 판사로 서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장본인이었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이르는 것일까 싶다.

지난해 3월 현재 탄핵 결정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식적'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기존의 구속 기간 해석인 '날'을 '시간'으로 해석해 풀어준 사례는 일반 법 갑 정과는 사뭇 괴리가 있었다. 재판 내내 제기됐던 '재판을 레크레이션 진행하다 한다'라는 우려도 엄숙하고 엄중해야 할 재판을 희화화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비단 부조리한 장면들은 내란 혐의 재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 고위직을 역임했거나 현재 국회의원인 인사들을 둘러싼 부조리한 행태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대선에서 '괴물 독재국가의 출현을 막는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행보는 두고두고 뒷말을 낳았다. 민주당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인 그의 '배신'은 지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특히 이해

찬 전 총리 조문을 가지 않은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그의 도량을 가능할 수 있는 사례였다.

젊은이들을 분노하게 하고 절망하게 했던 '부조리한 판결'도 있다. '곽상도 아들 대장동 50억 퇴직금' 무죄판단이 대표적이다. 1심에서 곽 의원은 공소기각, 아들은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평생을 일해도 퇴직금이 고작 1억원 안팎인 직장인들이 부지가수인데 '뇌물'이 아니 고서야 6년 남짓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이 50억원이라는 사실은 젊은이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았다.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한 곽 전 의원을 보고 업자들이 돈을 준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치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

얼마 전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민의힘 박종권 의원의 발언은 여러 면에서 부조리한 상황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우리 국군에 대해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정부와 국군에 대한 모독"이라고 맞받아쳤다. 자유를 찾아 탈북해 남한에서 국회의원이 된 그가 해서 안 될 말이었다. 박 의원은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기에 그 같은 발언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터였다.

다시 소설 '이방인'으로 돌아가보자. 책 제목부터 '이방인' (異邦人)인 걸 보면 주인공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인물인지 보여준다. 12·3 내란부터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부조리한 장면과 상황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을 많이 목도했다.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가장 압권은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1심 판결문의 비유였다. 상식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란을 성경 읽는 행위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도단이자 부조리다.

초고령사회 서글픈 자화상 '반찬 없는 밥상'

차'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되는 정책 변화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2026년부터 경로당 관련 예산이 일부는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여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국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복지 외주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 자부담으로 근근이 버려온 부식비를 이제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새로 편성해야 하는데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소도시들이 이 예산을 확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단순히 급식 횟수를 주 5일로 늘린다는 산술적인 확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2025년 889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을 최소 1384억원 이상으로 495억원을 증액해야 했는데 올해 6.8% 증가한 950억원에 그쳤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획기적인 예산의 뒷받침 없이 제공 횟수만 늘릴 경우 한정된 재원을 쪼개 써야 하기에 결국 '식단의 질 저하'라는 전형적인 복지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이러다 반찬 없는 밥상이 차려지는 것 아니냐"는 탄식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다행히 광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식사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령친화 식품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한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먼저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의 좌식 식탁을 입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하며 '식사 환경의 질' 자체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단돈 1000원으로 든든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천원 한끼' 식당을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소외되었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하며 '어느 곳에 있던 소외되지 않는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초고령사회의 거대한 하중을 견뎌낼 수 없다. 노인에게 제공되는 한 끼 식사는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건강관리와 사회적 연결, 그리고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이제라도 부식비 지원을 포함한 국비 보조 확대, 지자체 재정력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수립, 그리고 급식 품질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6년 우리는 '숫자만 늘어난 확대'가 아니라 여러 신들의 식탁 위에 실질적인 온기가 전해지는 '진짜 복지'를 보고 싶다. 정책의 성과는 보도자료의 수치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밥상 위 반찬 가짓수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초고령사회는 국가의 복지 철학을 시험하는 무대다. 정부는 이제라도 '겉치레 정책'에서 벗어나 '밥상 위의 복지'를 책임지는 국가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초고령사회라는 파고를 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예산의 숫자를 늘리는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노인의 삶을 대하는 국가의 진정성 있는 태도다.

누군가는 청춘 대신 돌봄을 선택한다

로 조용히 넘겨왔다. 그러나 돌봄은 미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누군가의 청춘이 대가가 되어서는 안된다.

2023년 7월, 광주 서구는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보이지 않던 존재를 제도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다. 그것이 착한도시의 첫 번째 책임이었다.

조례 제정 이후 1000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선언에 머물지 않았다.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수당을 도입해 월 25만원, 연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860여 명이 도움을 받았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너는 혼자야 아니다"라는 사회의 메시지였다. 수당뿐만 아니라, 돌봄지원 연계, 사례관리, 정서 지원, 자조모임, 자립 프로그램까지 청년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이해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왔다. 행정은 숫자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우리 착한도시 서구 공직자들은 현장에서 조금씩 다시 웃기 시작한 청년들을 보았다. 그 변화가 '착한도시'가 걸어온 1000일의 의미다.

오는 28일, 제6회 '함께서구 오-잇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오천원의 나눔으로 이웃의 희망을 잇는 5.2km의

길. 이 길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다. 가족돌봄청년의 삶을 이해하고 "당신의 길에 우리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오잇길에 8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고 8700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97명의 청년에게 그 마음이 전해졌다. 행정이 시작했지만 시민이 완성했다. 이것이 착한도시 서구의 방식이다. 정책은 행정이 만들고 희망은 공동체가 완성한다.

가족돌봄청년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의 가치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누구의 손을 먼저 잡을 것인가. 서구는 앞으로도 돌봄과 꿈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주저없이 손을 내미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다. 올해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법'과 연계해 보건·교육·고용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는 결국 사람이다.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의 곁에 끝까지 남아 있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착한도시 서구'다. 1000일을 걸어온 이 길을 앞으로의 1000일도 함께 걸어갈 것이다. 28일, 오-잇길에서 그 뜻에 함께 하고 싶은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다.

社說

창원·청주시 선례로 본 광주전남 통합 과제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인 '전남광주특별자치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만 앞둔 상태로 9부 능선을 넘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행정 통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 기초단체 통합이긴 하지만 창원시(마산·창원·진해)와 청주시(청주·청원)의 사례를 통해 보면 청사 주 소재지 문제가 초반 생각보다 심각한 갈등 요인이었다.

창원시의 경우 통합 준비과정에서 청사 소재지 관련 공청회와 여론조사까지 했지만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한 것을 고려해 통합 특별시장이 취임 직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사실 주 소재지를 어디에 두느냐는 큰 문제가 아닌데 상징성이 커 갈등을 일으킬 휘발성 요인이다.

재정 통합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광주·전남의 예산을 합칠 경우 배분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날 수 있고 창원시 사례처럼 정부가 약속한 재정 인센티브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치작업을 해야 한다.

두 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주·전남도도 능 복합형 지자체 통합으로 주민 기피시설 배치가 갈등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기피시설 배치는 전남도민들의 가장 큰 우려 가운데 하나일텐데 공정한 입지 선정과 인센티브를 전제로 한 주민 공모제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정과 복지 등 전산망은 행정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복병이다. 원천히 다른 도농 간 정보 체계를 하나로 엮어내지 못한다면 행정 마비로 민원 대란을 일으킬 수 있어 지금부터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승진 속도의 차이 조정 등 공무원 조직의 빠른 통합을 끌어내는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무시할 수 없는 과제로 통합 준비 과정에서 체크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국내에서 처음 이뤄지는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과장하면 미국의 주 정부에 비견할만한 변화다. 창원시와 청주시의 시행착오를 참고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촘촘하게 설계할 수 있다.

'등골 브레이크' 교복 담합 발본색원 해야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의 교복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0만원에 육박하는 교복 구입비를 거론하며 '등골 브레이크'라고 지칭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잇따라 철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낙찰 하한선인 투찰률이 90%를 넘고 학교 측이 제시한 상한선에 근접한 학교도 많은 것을 보면 업체들이 담합에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교 가운데 투찰률 90% 이상인 학교가 사립학교 10곳을 포함해 12곳이었다. 전남의 경우 38개 중·고교 가운데 33개교의 투찰률이 95%를 넘어 학교측이 제시한 상한선에 근접했고 업체가 제시한 입찰 가격 차이도 1000~2000원에 불과할 정

도니 담합 의심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광주 광산구의 고교 4곳에선 최근 교복과 체육복 구매처를 한 곳으로 선정해 특정업체 몰아주기의 의혹과 함께 학부모들이 한꺼번에 구매처로 물리는 '교복 대란'을 초래했다. 교복 담합 의혹은 근절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2023년에도 광주 지역 중·고교에서 조직적 담합이 적발돼 27개 업체가 조사를 받았고 교복업체 29명이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교복 담합은 일선 학교의 귀차니즘 행태와 뒷돈 의혹 때문에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거나 안 오른 물가가 없는데 학기초 교복까지 업자들의 담합으로 학부모들의 등골을 휘게 방치해선 안된다.

이번에야말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담합 의혹을 밝혀내고 사실상 확인되면 형사 처벌과 입찰 제한으로 엄단해야 한다.

無等鼓

최악의 비호감 투표다.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 첫 통합시장 선거는 '비호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의 첫 통합시장 선거인데도 유권자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다"는 답변이 30%가량 나오고 있으며 1위 후보들도 20% 안팎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에 따른 지역민의 불안감이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광주시

비호감 투표

특법법 논의 등 '세밀한 정치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광주 후보가 전남에서 조직을 만들고, 전남 후보가 광주에서 표를 얻어야 하는 '정치 환경의 대변화'도 한몫하고 있다. 이에 후보들은 상대 진영을 찾아다니며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을 쏟아내면서 더욱 '비호감'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탈당' 등으로 민주당을 떠났거나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문제를 일으킨 인사들을 영입하는 통합시장 후보들이 늘면 서 지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타지역에서 조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기초단체장

라진다'는 우려 탓에 정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민들도 '대도시에 흡수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정치인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경선 방식과 동떨어진 여론조사도 혼란을 키우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경선률은 권리당원 50%와 일반여론조사 50%인데 최근 공개되는 여론조사에는 권리당원의 목소리가 모두 빠져있다.

입후보자도 문제다. 몇 명 되지 않는 광주전남 다선 국회의원들이 앞다퉀 통합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정작 국회에서

/오광록 서울취재본부 부장 kroh@

은편칼럼



심명섭 (사)대한노인회 광주구회 수완 증흥SC 경로회 회장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올해 65세에 달하는 61년생 94만명이 노인에 편입됨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현재 1090만 6649명으로 전체인구의 21.21%를 차지,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 서 있다. 국가의 품격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경로당의 풍경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 정부는 올해 들어 노인 공영일자리 5만 개를 늘리고 경로당 점심 제공을 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겠다는 화려한 정책적 수사를 쏟아냈지만 그 화려한 발표 이면에는 "과연 누가 비용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현실적이고도 절박한 질문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로당 급식 지원 체계의 구조적 결함은 심각하다. 조리 인력의 인건비나 냉난방비, 쌀값(양곡비)은 국비로 지원되지만 식사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인 '부식비(반찬값)'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몫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어느 지역 어르신은 고가반찬을 드시고 어느 지역 어르신은 김치 한 조각에 만족해야 하는 '노인 복지의 지역 격

기고



허희심 광주시 서구 복지일자리국장

도시는 무엇으로 기억되어야 할까. 높은 건물일까 화려한 개발일까. 필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가장 약한 사람의 곁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따뜻하게 지켜왔는가. 그것이 도시의 품격이라고 믿는다. '착한도시 서구'가 바로 그런 도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착한도시'는 선의(善意)를 말하는 도시가 아니라 선한 정책을 실천하는 도시다.

누군가는 오늘도 학교 대신 병원으로 향하고 취업 준비 대신 가족의 약 병지를 챙긴다. 아픈 부모를 돌보고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보살피며 자신의 꿈을 잠시 미룬 채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는 이들을 '가족돌봄청년'이라 부른다.

그동안 사회는 이들의 희생을 '효심'이라는 이름으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